

安 “무원칙 연대 안돼” vs 孫·朴 “전략상 필요”

국민의당 경선 2차 토론회

■사드

安 “국가간 합의 존중”

孫 “긍정적 효과 있다”

朴 “北 비핵화시 철회해야”

■개헌시기

安 “내년 지방선거때 바람직”

孫 “대선과 동시 비현실적”

朴 “발의후 40일이면 충분”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들은 20일 보·중편방송 4개사가 주최한 두 번째 합동토론회에서 각종 쟁점을 놓고 ‘3각 공방’을 벌였다.

연대론이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됐고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개헌 시기, 4차 산업혁명 대책 등이 토론 테이블 위에 올랐다.

◇연대론=자강론과 독자 노선을 고수하는 안철수 전 대표에 맞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박주선 국회의원장이 나란히 ‘대선 전 연대’를 압박하며 뚜렷한 전선이 형성됐다.

안 전 대표는 토론회 초반 ‘대연정’에 대한 찬반을 묻자 홀로 반대하면서 “선거를 치르기 전에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께 믿어달라고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을 중심으로 협치하는 모델을 그려나가게 된다”며 “우선은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연대를 반대한다. 그리고 특정 정치인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손 전 대표는 “연립정부를 대통령



20일 오후 서울 정동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후보 제2차 경선 토론회에서 안철수(왼쪽부터), 박주선, 손학규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TV조선, 채널A, MBN, 연합뉴스TV로 생중계 됐다. /연합뉴스

에 당선되고 나서 하겠다면 안 된다”면서 “개혁세력이 하나로 연대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안을 국민께 제시하고 나라를 이렇게 안정시키고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은 “민주당은 안 된다며 대안정당으로 새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정당이 국민의당인데, 과연 우리가 민주당과 차별화된 정책을 무엇을 주장했느냐. 대연정이 우리의 전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시기=‘대선 때 개헌투표’를 놓고 박 부의장은 “국회에 제안된 이후 40일이면 충분히 국민투표를 부쳐서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솔직히 안철수·문재인 후보만 동의하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전 대표는 “우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도 “지금 대선과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가 처음부터 개헌을 시작했으면 이미 끝났겠지만 민주당의 전문반개헌세력에 의해 개헌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 안 전 대표가 “국가 간 합의는 다음 정부에서 존중해야 한다. 상황이 바뀌었으면 정치인들은 적절한 국익을 위해 입장을 바꾸는 게 맞다”며, 박 부의장도 “사드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부정적 파장을 막는 게 중요하다”며 각각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손 전 대표는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 국회의 협의를 거치고 이해 당사국인 중국과도 협의하는 등 우리 주변이 다 같이 합의해서 북한의 핵실험 저지하고 비핵화 이뤄야 한단 생각이었다”며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

다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손 전 대표는 “정부가 단지를 만들고 인프라를 제공해줄 때 민간이 아주 활발하게 기업을 영위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무한도전 특구를 전국적으로 10개를 만들어 1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안 전 대표는 “영남권·호남권·수도권·충청권 4개 정도에 특구를 만들겠다”면서 “교육혁명을 통해 인재를 기르고 과학기술에 제대로 투자하고 공정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인공지능 로봇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혁명의 산업트렌드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R&D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에 예산을 투입해 연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文 캠프 오거돈 “부산 대통령”

‘전두환 표창’ 등 잇단 물의…5·18 유가족 항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캠프 인사가 잇따라 구설수를 겪고 있다.

문재인 캠프 측 오거돈 부산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지난 19일 ‘문재인 부산 선대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부산 사람이 주체가 돼 부산 대통령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우리 부산이 다시 한 번 함께 만들어내는 부산 대통령은 고질적인 지역 구도를 타파하고, 진정한 동서 화합이 만들어낸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20일 야권 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허영일 공보 특보는 이날 “명백한 지역주의 선동이 고 호남 무시 발언”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지역’ 대통령을 뽑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측 정성호 의원은 “지역주의의 망령을 되살려내는 것은 개혁의 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에서는 “발언 전체를 맥락을 보면 영호남 전체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 19일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사신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내 인생의 한 장면’ 코너

에서 특전사 복무 때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시 제1공수여단 여단장이 전두환 장군, 반란군의 가장 우두머리였는데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성 고양시장은 “전두환 장군 표창은 버려야지 왜 갖고 계시냐”고 면박을 줬다. 또 토론회가 끝나자 안희정 지사 측은 문 전 대표 측이 이 사실을 ‘가짜뉴스’로 언급했던 사례까지 공개하면 공세를 취했고, 문 전 대표 측은 “명백한 네거티브”라며 반박했다. 이 시장 측과 국민의당도 문 전 대표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 발언은 광주로까지 불뚝이 튀었다. 20일 광주를 방문한 문 전 대표는 옛 전남도청 앞 5·18 유족들의 농성장을 찾다가 한 여성으로부터 “여기가 어떤 자리냐. 전두환 때문에 자식 남편 다 잃은 자리다”며 “머리가 부들부들 떨린다. 암마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전두환 말만 나오면 머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항의를 받았다. 다른 한 남성도 “그게 자랑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저는 5·18 전두환 군부에 의해 구속된 사람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군 복무 시절) 그분이 여단장이었다”면서 “그때 반란군의 우두머리였다고 (어제) 말씀도 드렸다”고 진의를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2차 컷오프

김관용·김진태·이인제·홍준표 압축…비박 대 친박 대결 가능성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본선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김진태 의원, 이인제 전 최고위원, 홍준표 경남도지사(이상 가나다순) 등 4명이 진출했다.

안상수·원유철 의원은 아쉽게 2차 컷오프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 김광림 위원장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의 지지를 상승세가 주목받고 있다. 무주공산이 된 보수진영의 대표주자로 올라선 데 이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을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2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3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은 문재인 36.6%(▲1.5%p), 안희정 15.6%(▲1.5%p), 안철수 12.0%(▲1.8%p), 이재명 10.8%(▲0.5

p), 홍준표 9.8%(▲6.2%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 지사의 급등세가 주목된다. 홍 지사는 지난 3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6.2%p 급등한 9.8%를 기록했다. 1주일 만에 지지율이 3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본인의 기존 최고치(7.6%, 2014년 11월 4주차)도 약 2년 4개월 만에 경신했다.

홍 지사는 지난 18일 실시된 1차 컷오프에서도 절반에 육박하는 득표로 2위와 압도적 격차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본경선에서는 비박(비박근혜)의 홍 지사와 친박(친박근혜)의 주자 간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본경선은 책임당원 50%, 일반국민 50%의 여론이 반영되며 오는 31일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불씨 꺼지는 ‘대선 전 개헌’

민주 불참에 동력 잃어…3당 내부서도 불가론 확산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추진하는 ‘대선 전 개헌’이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개헌파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3당 내부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면서 공동 헌법개정안 발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원래 계획대로 이번 주 중으로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과 힘을 합쳐 만든 3당 공동 개헌안을 국회에 정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쳐,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따라서 5월9일 대선을 고려하면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금주가 개헌안 발의의 ‘골든타임’이다.

문제는 내부 이견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121석)의 불참에 따라 3당(한국당 93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33석) 소속 의원 165명이 대부분 참여해야 발의가 가능한데 만 목소리가 자꾸 새어 나오는 형국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날 tbs FM ‘김여준의 뉴스공장’에서 ‘대선 안에 개헌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아예 개헌 작업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개헌에 적극적인 바른정당에서도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전날 TV토론에서 대선 때 개헌이 어렵

다는 공통적인 견해를 내놴다.

특히 개헌안에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더라도 의결 정족수인 200명(재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을 채우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발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 탓에 3당 개헌 작업 실무진은 공동안을 다 만들어 놓고도 아직 소속 의원들에게 화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3당 공동으로 마련한 개헌안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과 19대 대통령 임기의 3년 단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를 국무총리에서 국회의장으로 바꾸고, 대통령의 임기 중 당적 보유를 금지하며,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

경.공매컨설팅
(투자금 100% 책임보장)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650,000,000

광산구 옥동 공장

대지 500평
건물 419평

최저가 776,000,000
감정가 1,108,000,000

서구 마곡동 토지

토지 202평

최저가 468,000,000
최고가 468,000,000

서구 용두동 토지

토지 1684평

최저가 256,000,000
최고가 256,000,000

서구 쌍촌동 대지

대지 151평

최저가 212,000,000
최고가 302,000,000

서구 쌍촌동 원룸

토지 86평
대지 340평

최저가 788,000,000
감정가 1,125,000,000

서구 쌍촌동 근린생활시설

토지 245평
건물 270평

감정가 2,919,000,000

운림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역성 아주중유)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차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정가격 9,000만원

금 매매 6,2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8559-8905

이용국 팀장

공인중개사 00명 모집
광주법원 입구 062)232-9994

010-3070-2147

유 여사